

## 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김 영 규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요 약 문

이 논문은 북한 민법에 있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는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및 북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률행위·물권변동과 채권변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을 비교·검토한 후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민법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는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을 인정하는 점, 가장 주된 원인으로 법률행위를 다루는 점, 물권변동의 원인으로 법률행위와 그 밖의 것으로 나누어 규율할 수 있는 점, 개인소유권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점, 채권발생원인으로서 계약과 부당이득·불법행위를 다루는 점, 채권소멸원인으로서 변제와 상계·경계·면제·혼동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법률행위를 비롯한 모든 권리변동의 원인에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개인소유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점, 모든 무주물을 국가귀속으로 하는 점,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다루는 점, 계획적 계약을 인정하고 우리 민법과 다른 저금계약 등의 일반계약을 두고 있는 점, 불법원인급여를 국가귀속으로 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리변동의 원인에 대하여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을 논하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해야 하는 만치 그에 위배되며 정치색을 띠는 북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은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유사한 요소들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되, 서로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적 혼란을 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들로써 권리변동의 원인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점유권,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사무관리,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 주제어

북한 민법,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물권, 채권, 경과규정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 目 次 】

I. 서 론	3. 채권변동의 원인
II. 북한 민법상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IV.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비 교와 통합방안
1. 법률사실	1.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비교
2. 법률요건	2. 권리변동의 원인의 통합방안
III. 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과 관련 규정	V. 여 론
1. 권리변동의 원인과 법률행위	
2. 물권변동의 원인	

## I. 서 론

민사상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변동과 관련해서 1990년 북한 민법(제38조, 제66조)은 ‘소유권의 발생기초’ 및 ‘채권채무의 발생기초’라는 조문 아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을 공통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채권채무의 발생기초와 관련해서 ‘국가의 행정문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민법(제24조)은 ‘법률행위의 형식’이라는 조문 아래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적 조건(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의 민법이론은 1990년 민법 제정 이전부터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개개의 여러 법률사실<sup>1)</sup>들과 이러한 법률사실의 총체인 법적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법률행위를 중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민법 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sup>2)</sup>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105-106면.

2) 백영훈, “법률사실의 분류”, 「력사법학」, 제51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369면 ; 윤종철,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의 대등한 지위와 독자성에 대한 리해”, 「력사법학」, 제58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115면.

여기서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즉 법률행위를 비롯한 법률요건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로서 법률사실인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규명하는 것은 남북한 민법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민법 통합을 논함에 있어서 마땅히 선행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 민법의 규정과 문헌 및 자료에 나타난 북한 민법이론을 중심으로 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및 북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률행위, 물권변동과 채권변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을 비교·검토한 후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 1. 법률사실

#### 가. 법률사실과 사건

북한의 민법이론은 김정일의 교시<sup>3)</sup>를 바탕으로 해서 법률사실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사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이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개개의 원인으로서는, 이는 행위와 사건으로 나뉘어진다.<sup>4)</sup>

위에서 ‘행위’와 ‘사건’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사건’은 시간의 경과, 사망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민사적인 권리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실적 사정을 말한다.<sup>5)</sup>

3) 북한의 민법이론은 김정일이 “사법기관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 관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면서(김정일, 「김정일선집(제7권)」, 312면), 이를 근거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자면 민사 법률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백영훈, 앞의 글, 65-66면).

4) 백영훈, 앞의 글, 65면 ; 김천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사회교육권학보」, 제36호, 사회과학출판사, 2002, 34면. 위에 따르면 사건의 모습으로는, 시효의 결과로 인한 청구권의 소멸과 같이 채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사망에 의한 법정 상속관계의 발생을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 나. 법률사실과 행위

또 북한의 민법이론은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민사적인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실적 사정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국가와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합하는 행위인 적법적 행위와 부합하지 않는 행위인 위법적 행위로 나누고 있다.<sup>6)</sup> 이에 따르면 위법적 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타인의 인신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침해행위로서,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이라는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원인이 된다.

또한 북한의 민법이론은 ‘적법적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그 의사표시에 따른 법적 효과에 따라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적법한 행위를 ‘민사법률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행정적 행위’나 ‘민사법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인 적법한 행위와 구별하고 있다.<sup>7)</sup> 이에 따르면 ‘행정적 행위’는 상급국가기관으로 계획을 시달 받은 하급국가기관 및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이 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따라서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고, ‘민사법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는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

위에 따라 북한 민법이론은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사실을 행위와 사건으로 나누고 다시 행위를 적법한 행위와 위법한 행위로 나누는 등으로 이론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에 가장 영향을 미친 1964년의 러시아 민법(제4조)의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근거’의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 러시아 민법(제4조)은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근거’를 규정하면서 행위와 사건으로 크게 법률사실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법률행위 이외에 법률로 규정된 행위, 행정작용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sup>8)</sup> 북한 민법이론이 위 법률사실을 전개하는 내용 역시 위 러시아 민법의 해석론<sup>9)</sup>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5) 백영훈, 앞의 글, 65면 ; 김천일, 앞의 글, 34면.

6) 백영훈, 앞의 글, 67면 ; 김천일, 앞의 글, 34면.

7) 백영훈, 앞의 글, 66-67면.

8) 1964년 러시아 민법(4조)은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근거’를 행위와 사건으로 나누면서, ‘행위’에 대해서 다시 ‘법률행위, 행정작용, 그 밖의 공민과 조직체의 적법한 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2. 법률요건

### 가. 법률요건과 법률사건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의 규정과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객관적인 법률사실의 총체를 법적 조건이라고 이해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북한 민법이론의 ‘법적 조건’의 의미는 우리 민법이론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사실을 통틀어 ‘법률요건’으로 이해하는 것<sup>11)</sup>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률요건에 대하여 북한 민법이론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 그 밖의 것인 ‘법률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2)</sup>

### 나. 법률요건과 법률행위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에서와 같이 법률사실의 총체로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법적 조건’을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한 민법은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모두를 통틀어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를 반영하여 민사적인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인 법률행위를 그 용어의 모두(冒頭)에 ‘민사’를 붙여서 ‘민사법률행위’라고 부르면서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북한 민법이론은 적법한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법률행위를 강조하는 면에서 우

9) 1964년 러시아 민법(4조)의 ‘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근거’인 행위’의 해석과 관련해서 러시아민법이론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계약이 가장 중요하고, ‘행정작용’은 법령을 공포한 행정기관과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사이의 행정적인 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관계가 그 중심이며, ‘그 밖의 공민과 조직체의 적법한 행위’는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권리의무를 발생하는 사실행위로 해석하고 있다(Братусь С.Н., Садиков О.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82, § 4, par 2).

10) 윤중철, 앞의 글, 115면.

11)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8판)」, 박영사, 2018, 246면 ; 김영규, 「민법총칙(제2판)」, 진원사, 2015, 283면.

12)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률사건이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실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윤중철, 앞의 글, 115면). 다만 북한의 민법이론 중에서는,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법률사실을 법률사건과 법률행위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255면). 이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사람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실적 과정이라면, 법률사건은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실적 과정이다.

리와 같으나, 그 밑바탕에 있어서 김정일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노동당 정책의 관철을 위한 수단이라는 건강부회적인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인다.<sup>13)</sup>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이론은 비정치적 성격을 띠어야 할 사적 법률행위에서 마저도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법률행위제도는 착취를 조장하는 남한(우리) 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민법의 현행 내용을 구체적 근거로 하지 않는 억지 논리일 뿐이다.<sup>14)</sup>

### Ⅲ. 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과 관련 규정

#### 1. 권리변동의 원인과 법률행위

##### 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의 법률요건과 법률행위

북한 민법(제24조)은 권리변동의 결과를 가져오는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를 규정

- 
- 13) 북한의 민법이론은, 김정일이 “사법검찰기관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 관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고 지적했다고 인용하면서(김정일선집, 제7권, 312면),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민사법률관계에서도 나타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의 적법성 요구를 옳게 판단하고 해당 민법규범을 정확히 적용하여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백영훈, 앞의 글, 67면). 이에 따라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자면 민사법률관계의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사실 중 적법행위 중 민사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북한 민법이론이 유사하나, 북한민법이론은 법률행위의 기저(基底)에 노동당의 경제정책의 옹호 관철이라는 통치관계를 강조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14) 북한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의 법률행위제도에 대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의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이 날조하여 실시하고 있는 ‘민법’의 ‘법률행위제도’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 남조선인민들을 무제한하게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에 남조선괴뢰정권이 날조한 ‘민법’의 ‘법률행위제도’가 가지는 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반동적 본질이 있다. 이처럼 부르조아민법, 특히는 남조선 괴뢰정권이 날조한 ‘민법’의 ‘법률행위제도’는 공화국민법의 법률행위제도와 그 본질과 역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그와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구체적 예와 관련해서 “부르조아민법에서 고용계약제도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매매계약제도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르조아민법의 소작계약제도는 지주들이 근로농민을 착취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르조아민법의 그 밖의 법률행위제도들도 모두 지주,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적수단들이다.”라고 그 근거를 들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앞의 책<민법 1>, 105면). 그러나 이는 모두 우리 법제에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근로계약, 이미 폐지된 소작제도(소작계약), 소비자와 고객의 지위를 보장하는 경제법 등에 의해서 수정되는 매매계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있으며, 이의 해석에 있어서 북한 민법이론은 법률효과를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놓고 그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고 있다.

다만 북한 민법은 가족법을 포함하는 우리 민법과 달리 재산관계만을 규율하므로 북한 민법이 말하는 법률행위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제외된 재산행위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법(제103조)의 법률행위가 헌법(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시장(市場)을 중심으로 한 재산거래에서 사적 자치를 실천하는 수단인 것<sup>15)</sup>과 달리 북한 민법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부정<sup>16)</sup>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나. 북한 민법의 법률행위의 종류와 분류

##### (1) 북한 민법의 법률행위의 종류

북한 민법(24조)은 법률행위를 분류와 관련해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민법이론은 법률행위를 기본적으로 당사자(의사표시)의 수(數)와 모습을 기준으로 우리 민법이론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와 유사하게 일방적 법률행위, 쌍방적 법률행위, 다방적 법률행위로 나누고 있다.<sup>17)</sup>

1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법상 반영은 시장을 매개로 한 재산거래에서 개인의 창의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하여 법률관계를 맺고 사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田中英夫·竹内昭夫, 「法の實現における私人の役割」, 東京大學出版會, 1987, p. 173).

16) 북한 민법이론은 자본주의사회를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 단정하면서 위 사회에서의 자유는 자본가와 지주를 위한 것이며, 근로자 등 인민대중에게는 법률행위자유의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앞의 책, 256면).

17) 북한 민법이론은 일방적 법률행위를 일명 단독적 법률행위라고 부르면서 그 예로 상속권의 포기, 대리권을 위임하는 행위와 대리권의 취소, 기관·기업소·단체 상호간에 제품공급이나 기본건설 또는 화물수송에 대한 대금지불청구를 승인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앞의 책 <민법 1>, 105면). 또한 북한 민법이론은 쌍방적 법률행위를 가장 보편적인 법률행위의 형식으로 이해하면서 제의(청약)과 동의(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북한 민법이론은 다방적 법률행위에 대해 수인의 당사자들이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로서 법인의 조직이나 무역협정과 같이 반드시 여러 당사자들이 참가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설정되는 것으로서 일방적 법률행위나 쌍방적 법률행위 보다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되며 공고성을 띠는 것으로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백영훈, 앞의 글, 68면).

또 북한 민법은 법률행위의 분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북한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상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독립행위와 보조행위에 각각에 대응하는 유상적 법률행위와 무상적 법률행위, 합의적 법률행위와 이행적 법률행위, 주되는 법률행위와 종속되는 법률행위, 원인과 떼어 수 없는 법률행위와 원인과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법률행위, 독자적인 법률행위와 보조적인 법률행위로 나누고 있다.<sup>18)</sup> 이 밖에 북한 민법이론은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률효과의 발생시기에 따라 우리 민법과 같이 생전행위와 사후행위로 나누고 있고, 재산권변동에 따른 법률효과의 모습에 따라 물권적 법률행위와 채권적 법률행위로 나누고 있다.<sup>19)</sup>

다음에서는 법률행위의 종류를 나누는 위의 북한 민법이론의 특징적인 태도를 살펴본다.

##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북한 민법(24조)은 법률행위의 형식과 관련해서 “민사법률관계의 성질,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이나 서면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불요식행위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는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요식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1964년 러시아 민법(제43조, 제44조)의 태도를 계수한 것으로서, 러시아 민법은 소매매와 같이 체결과 동시에 이행하는 법률행위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sup>20)</sup> 일정한 경우는 반드시 서면 또는 공증의 방식에 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sup>21)</sup>

18) 백영훈, 앞의 글, 65-67면.

19) 백영훈, 위의 글, 70면.

20) 러시아 민법이론은, 구두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법률행위는 구두를 통한 형식으로도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법률행위는 체결 과정에서 이행되고, 그 시점에 이미 그러한 법률행위는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보통 그 법적 효력이 종료되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나 실행을 서면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법률행위로는 주로 소매매매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 42, par. 2).

21) 1964년 러시아 민법(제43조)는 ‘서면에 의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다음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국가, 협동단체, 공공기관 상호간 및 이들과 시민과의 법률행위. 다만 본법 제43조에서 언급된 법률행위 및 소비에트연방과 러시아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입법에 규정된 특수유형의 법률행위는 제외된다. (2) 100루블을 초과하는 시민들 상호간의 법률행위. 다만 본법 제43조에서 언급한 경우나 소비에트연방과 러시아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입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된



위의 북한 민법(제93조, 제94조)이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는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이 당사자로 하는 계획적 계약을 들 수 있고, ‘공증’으로 하는 요식행위로는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26조 제2항)은 일반 계약으로서 은행대부계약도 사회주의적 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서면 등의 방식을 갖추어서 체결해야 하는 요식행위로 다루고 있다.<sup>22)</sup> 즉 은행대부계약을 통해 차주인 사회주의적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이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신청서에 경영활동에서 나타난 결함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고치겠다는 대책과 대부금액, 그의 용도와 반환기한을 밝혀서 은행대부계약서인 서면에 따라서 하며, 이에 따른 은행계약서는 은행의 일반적인 의사를 반영한 문건으로서, 위 계약서를 통해서 대부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며 대부거래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요구를 실현하게 된다.<sup>23)</sup> 그리고 이러한 요식행위의 방식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여기서 요식행위에 대해서 북한 민법이론은 해당 경제거래의 중요성과 복잡성, 기간의 장기성 등을 고려해서 특정 형식을 지킬 것을 강제함으로써 경제거래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보장하기 위함을 도모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4)</sup>

### (3) 물권적 법률행위와 채권적 법률행위

북한 민법이론은 재산권변동의 효과가 무엇이나에 따라 물권적 법률행위와 채권적 법률행위로 나누고 있다.<sup>25)</sup> 이에 따르면 물권적 법률행위는 소유권이나 경영상관리권

다. (3) 법률이 서면형식을 요구하는 시민 상호간의 기타의 법률행위. 서면에 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이 그 서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어떤 시민이 신체적 결함, 질병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시민이 그 법률행위를 서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의 지시에 의하여 다른 시민이 그 법률행위를 하는 시민이 일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기관, 그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기관, 그 시민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기관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하는 시민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이유를 지시함으로써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면 또는 공증이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북한 가족법 주석」, 법무부, 2015, 237면<김영규 집필 부분>).

22) 북한 민법(제226조 제2항)상 은행대부계약은 대주인 은행기관이 차주인 사회주의적 법인의 대부신청을 승인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성립한다.

2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민법학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117면.

24) 백영훈, 앞의 글, 69면.

25) 백영훈, 위의 글, 70면.

제한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채권적 법률행위는 채권을 설정하고 실현하는 매매계약·빌리기계약·꾸기계약·채권이전계약 등으로서, 양자는 우선적 효력과 권리의 보호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 민법이론은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모두 묶어서 채권적 법률행위로 이해하고 있다.<sup>26)</sup>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와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권발생 이외의 채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행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 비해 단순성을 보인다.

#### (4) 유상적 법률행위와 무상적 법률행위

북한 민법이론은 유상적 법률행위는 유상계약과 같이 한 편 당사자가 일정한 재산이나 봉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편 당사자가 보상을 하는 행위(예컨대 팔고사기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작업봉사계약 등)인데 비하여 무상적 법률행위는 무상계약과 같이 위 경우 다른 편 당사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예컨대 공민 사이의 빌리기계약·꾸기계약 등)로 나누고 있다.<sup>27)</sup> 이에 따르면 양자는 당사자들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며, 유상계약은 무상계약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sup>28)</sup> 이와 관련해서 북한 민법(제82조)는 종류물의 이행에 있어서 유상행위에서는 채무자는 상등품을 넘겨주어야 하고, 무상행위에서는 중등품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9)</sup>

#### (5) 합의적 법률행위와 이행적 법률행위

북한 민법이론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이루어지는가, 아

26) 백영훈, 위의 글, 70면.

27)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앞의 책, 63-64면.

28) 북한 민법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면 빌리기계약에서 이 계약이 유상적인 때에는 무상적인 경우보다 물건을 빌려준 당사자의 책임이 더 높게 정해진다. 즉 유상의 빌리기계약인 경우에 물건을 빌려준 당사자는 빌려준 물건에 있는 결함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게 되어있으나 공민 사이의 무상의 빌리기 계약인 경우에는 비록 빌려준 물건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닌 이상은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게 된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앞의 책, 64면).

29) 북한의 민법이론은 이 밖에 유상의 빌리기계약에서는 물건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넘겨주는 자에게 있지만, 무상의 빌리기계약에서는 결함이 있어도 빌리는 자가 고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백영훈, 앞의 글, 68면).

니면 의사표시와 함께 해당 행위까지 같이 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앞의 것을 합의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뒤의 것을 이행적 법률행위라고 나누고 있다.<sup>30)</sup> 이에 따르면 양자는 해당 법률행위의 발생시점, 이행하는 물건의 품질기준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즉 합의적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물로서 정해진 대상으로 이행하면 되지만, 이행적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류물로서 가장 좋은 품질의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물건변동의 원인<sup>31)</sup>

### 가. 물건취득의 원인

북한 민법(제38조 제1항)은 물건취득의 원인으로 소유권취득과 관련해서 ‘소유권의 발생기초’라는 제목 아래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민법(제38조)의 위 규정은 크게 법령 등의 근거규정, 계약을 비롯한 행위, 사건 등으로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64년 러시아 민법(제4조)의 태도를 계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민법이론<sup>32)</sup>은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의 ‘법’은 국가소유권을 발생시키는 ‘산업·교통·운수·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등의 국유화법령<sup>33)</sup>을 들고 있다. 또 ‘계약’의 모습으로 팔고사기계약 등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

30) 백영훈, 앞의 글, 69면.

31)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 제2편에 해당하는 ‘물권’ 대신에 ‘소유권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권적 법률행위에 대응하는 재산행위에 대해서, 물권적 법률행위로 사용하면서 채권에 대응하는 재산권으로 ‘물권’을 사용하고 있다(백영훈, 앞의 글, 79면). 또 외국의 재산권제도에 대해서 북한 민법과 비교하는 최근 북한의 민법이론(리현숙, “외국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권의 대상에 대한 비교고찰,” 「력사법학」, 제50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89-93면.)도 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주의 민법으로서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에 영향을 미친 1986년 제정된 중국 민법통칙은 종래 물권편을 소유권제도로 다루고 있었으나,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3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앞의 책, 400-401면.

33) 북한의 국유화법령으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하여 1946년 3월 5일 공포된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과 1946년 8월 10일 공포된 ‘산업·교통·운수·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및 1947년 12월 22일 공포된 ‘북조선 지하자원, 산림지역 및 수역의 국유화에 관한 결정서’ 등을 들 수 있다.

인행위를 들고 있고, ‘행위’의 예로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밖에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람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법률 사실로서 해석하고 있다.

또 북한 민법(제52조, 제62조)의 규정 중 무주물에 대하여 국가소유권귀속을 다루는 규정<sup>34)</sup>과 개인에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관련 규정<sup>35)</sup>도 ‘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 민법(제38조 제1항)의 소유권취득원인 중 ‘계약’과 ‘행위’는 물건변동의 원인에 있어서 소유권취득 등 물건변동을 가져오는 계약과 그 밖의 법률행위로 해석되고, ‘법’과 ‘사건’은 물건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의 규정으로 평가된다.<sup>36)</sup>

여기서 물건취득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북한 민법이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타인의 재산을 장기간 점유하는 자에게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요근거로 들고 있으며,<sup>37)</sup> 이에 따라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 민법상 사회주의 소유권제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점<sup>38)</sup>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과 관련해서 북한 민법(제39조)은 점유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한 권능으로서만 다루고 있으며, 이는 1964년 러시아민법(제92조)의 태도를 계수한 것으로 보인다.<sup>39)</sup> 이에 따라 독립한 물건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34) 북한 민법(제52조)은 ‘임자 없는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제목 아래 “임자 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 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고 규정하여 무주물에 대하여 개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국가소유권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35) 북한 민법(제62조)은 ‘개인소유재산의 반환청구’와 관련해서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 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 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모르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선의의 양수인은 선의취득이 인정되게 된다.

36)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북한 민법 주석」, 법무부, 2015, 425면(김영규 집필 부분).

37) 김재교, “공화국 민법전 초안(총칙편) 작성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국가 관리에서 우리당 군중 로선의 관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63, 135-137면.

38) 이은정,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 「통일과 법률」, 제20호, 법무부, 2014, 68면 ;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앞의 책(북한 민법주석), 266면(이은정 집필 부분).

39) 1964년 러시아민법(제92조)은 소유권의 내용으로 ‘점유’를 그 첫째로 제시하고 있다. 이의 해석과 관련

취득과 상실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sup>40)</sup>

## 나. 물권소멸의 원인

### (1) 물권소멸의 원인과 북한 민법의 태도

북한 민법은 물권변동과 관련해서 소유권의 취득원인에 대응하는 소멸원인에 대해서 ‘물권편’에 해당하는 제2편(소유권제도)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 민법의 명문규정 중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규정과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북한 민법(제38조 1항)이 ‘법’은 국가소유권을 발생시키는 국유화법령 등에 의하여 종래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규정 역시 물권소멸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 (2) 불법원인급여의 국가귀속과 종래 소유권자의 소유권 소멸

북한 민법(제27조 단서)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예외로서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이행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됨은 물론이고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경우,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반사적 효과로 종래 불법원인급여자의 소유권이 소멸되므로, 이는 소유권 소멸의 원인이 된다.<sup>41)</sup>

해서 구소련 민법이론은 점유는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그 밖의 권능을 행사하는 전제로서, 점유는 재산에 대한 물질적 및 경제적 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 실질적 점유와 점유의 권리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 점유의 권능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어떤 권리(소유자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수차인의 권리, 담보권자의 권리 등)의 구성요소로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 9, par. 2).

40) 이 밖에 북한 민법(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제51조)은 국가소유권의 실현방법으로 경영상관리권과 국가재산이용권을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위 권리들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으로서 우리 법제상 용익물권에 준하는 제한물권으로 평가된다.

41) 북한 민법(제29조 단서)은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도 무효의 효과와 같이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반사적 효과로 종래 불법원인급여자의 소유권 소멸의 원인이 된다.

### (3) 소멸시효와 개인소유권의 소멸

우리 민법(제162조 제2항)상 소유권은 그 권리주체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 항구성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초기의 북한 민법이론도 국가소유권은 물론이고 사회협동단체소유권과 개인소유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sup>42)</sup>

그러나 북한 민법(제259조 제2항)은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유권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sup>43)</sup> 여기서 북한 민법(제52조, 제263조)상 소멸시효가 경과한 재산은 임자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소유로 되고, 당해 개인은 소멸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 (4) 그 밖의 물권의 소멸원인

북한 민법에 가장 영향을 미친 1964년 러시아 민법(제49조)는 물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강제수용과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강제수용’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용되는 재산의 대가를 지급하고 국가가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고, ‘몰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수용과 몰수에 따라 종래 수용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주체의 소유권 등의 물권은 소멸된다.

위의 내용 중 ‘몰수’와 관련해서 북한은 행정법상의 재산몰수와 형법상의 재산몰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2011년 10월 16일 개정된 북한 행정처벌법(제22조)은 몰수에 대해서 “비법(非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 제재이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처벌로서 이를 다루고 있다. 또 2015년 7월 22일 개정된 북한 형법(제23조 제7호, 제32조)은 형벌로서 재산몰수형을 다루면서 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무상

42) 사법성 편, “공화국 민법전(초안) 중 총칙과 소유권법편의 몇 가지 문제”, 「민주사법」, 제6호, 사법성, 1959, 26면.

43) 초기의 북한 이론 중에는 협동단체 소유권과 개인소유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는 민법상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견해가 있다(사법성 편, “공화국 민법전 초안(총칙편) 작성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민주사법」, 제6호, 사법성, 1959, 137-141면).

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고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한 모습으로 다루고 있다.<sup>44)</sup> 따라서 북한 민법상으로도 행정처벌이든 형벌이든 재산물수의 제재를 받은 당사자의 소유권 등의 물권은 소멸된다.

이 밖에 소유권 등 ‘목적물의 멸실’과 ‘물권의 포기’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북한 민법상으로도 물권의 소멸원인이 된다.

### 3. 채권변동의 원인

#### 가. 채권발생의 원인

##### (1) 채권발생의 원인

북한 민법(제66조)은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라는 조문 제목 아래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채무발생의 근거에 대해서 1964년 러시아 민법(제158조)은 “채권채무는 계약 또는 이 법 제4조가 규정하는 그 밖의 근거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러시아 민법(제4조)은 계약 이외에 계획법령을 포함한 ‘행정작용’, 공민과 조직체의 ‘그 밖의 행위’, 민사상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북한 민법(제66조)은 러시아 민법(제4조, 제159조)의 입법태도를 계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북한 민법이 약정채권의 발생원인으로서 ‘계약’과 국가의 ‘행정문건’ 이외의 ‘그 밖의 행위’로는 ‘불법행위’를 들 수 있고, 사람의 정신작용인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법률사실인 ‘사건’<sup>45)</sup>으로는 ‘부당이득’을 들 수 있다.

##### (2) 계 약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에 대해서 계획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

44) 따라서 북한 형법의 재산물수는 우리 법체계상 물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서, 주형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이다(한명섭, “북한에 의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자산 몰수·동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통일과 법률」, 제3호, 법무부, 2010, 66면).

4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앞의 책<민법 1>, 105면.

되는 5가지의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계획적 계약)<sup>46)</sup>과 12가지의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일반계약)<sup>47)</sup>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계획적 계약은 사적 자치가 배제된 사회주의 특유의 계약으로서 공민이 아닌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만 당사자 되고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계획과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무가 강제되고 계약내용이 계획에 따라 엄격한 구속을 받고 당사자 사이에 서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점, 분쟁을 중재절차로 다루는 점, 경제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계약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제 104조) 등의 특징을 띠는 등 통치관계를 뒷받침하는 공법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sup>48)</sup>

또한 일반계약은 계획과제에 기초함이 없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에 기초하여 맺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요식성과 계약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등 위에서 본 계획적 계약의 특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북한 민법(제221조·제 214조·제 167조)은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과 유사한 일반계약을 다수 규정하면서,<sup>49)</sup> 꾸기계약·위임계약·보관계약 등에서 무상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북한 민법(제193조-제 199조, 제200조-제204조, 제225조-제229조)은 우리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여객수송계약, 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무관리에 대해서 ‘무임관리’라 칭하면서 상호부조와 사회연대라는 취지보다 근로자들 속에서 국가사회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sup>50)</sup> 이에 따라 북한 민법(제175조, 제176조)은 사무관리를 ‘법적 의무 없이 하는 재산의 보관관리’와 ‘법적의무 없이 보관 관리하는 재산의 처리’

46) 북한 민법(제105조-제145조)은 제3편 제2장에서 계획적 계약에 해당하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으로서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농업생산물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수송계약 등의 5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47) 북한 민법(제148조-제234조)은 제3편 제3장에서 일반계약에 해당하는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팔고사기 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 계약, 위탁계약, 여객수송계약, 저금계약, 보험계약, 위임계약, 꾸기 계약, 은행대부계약, 합동작업계약 등 12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48) 리광천, “동의를 법적 효력과 특징,” 「정치법률연구」, 제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42면 ; 김영규, “채권의 발생과 소멸”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6-38면.

49) 북한 민법이 일반계약의 모습으로 다루는 팔고사기 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 계약, 위임계약, 꾸기 계약은 각각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으로서 매매, 도급, 임치, 사용대차와 임대차, 위임, 소비대차에 각각 대응하는 유사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50) 김영규, “남북한 채권법의 차이점,” 「통일과 법률」, 제6호, 법무부, 2011, 353면.



와 채권을 발생시키는 보관계약의 한 내용으로 다루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sup>51)</sup>

### (3) 국가의 행정문건

북한 민법(제66조)이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인민경제계획문건’)은 종래 ‘행정작용’ 또는 ‘행정명령’등의 이름으로 계획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민법이 인정하는 특유의 모습이다.<sup>52)</sup>

여기서 행정문건은 계획과제를 세우는 각 계획기관들이 세부계획을 세워 해당 사회주의 조직체인 법인(기관·기업소·단체)에 시달하는 행정지령의 문건으로서 법인이 자기가 받은 계획과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된 과제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맺을 데 대한 민사적 의무를 부담하고, 계획과제에 따른 인민경제계획문건은 채권채무를 발생시키게 된다.<sup>53)</sup>

### (4) 사건과 부당이득

북한 민법(제66조)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은 사람의 의사에 그 기초를 두지 않는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북한 민법(제235조)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남의 손실 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 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부당이득자로부터 반환을 통하여 회복시켜주는 법적 수단으로서 부당이득을 법정채권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4)</sup>

51) 북한 민법 제175조는 ‘법적 의무 없이 하는 재산의 보관관리’에 대해서 “공민은 법적의무 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민법(제176조)은 ‘법적의무 없이 보관 관리하는 재산의 처리’라는 제목 아래 “법적 의무 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1964년 러시아 민법(제4조)은 채권 등 권리의 발생근거로 ‘행정작용’으로 열거하고 있고, 중국의 민법 이론은 ‘행정명령’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다루고 있다(西北政法學院科研處, 『民法原理』, 1983, 175면).

5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53-54면 ;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앞의 책<북한 민법주석>, 698-699면(김영규 집필 부분).

54) 부당이득을 채권발생원인으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회주의적 소유(국가소유, 사회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가 입은 손실을 부당이득자로부터 반환을 통하여 회복시켜주는 법적 수

여기서 북한 민법(제237조)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에 있어서, 현물반환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부당이득자가 현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의 법률행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민법(27조, 29조)은 특수한 부당이득인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그 급여를 국가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 (5) 그 밖의 행위와 불법행위

북한 민법(제66조)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그 밖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그 밖의 행위로는 불법행위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북한 민법(제240조)은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소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민사책임인 불법행위를 채무불이행과 같이 책임일원주의(責任一元主義)에 따라 위법행위인 법률사실로서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위법성·인과관계·손해의 발생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 밖에 북한 민법은 무과실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특수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sup>55)</sup>

여기서 법정채권발생원인으로서 불법행위를 다루는 북한 민법(제240조, 제242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의 특징적인 태도는 책임일원주의에 따라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채무자(가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점, 불법행위의 효과와 관련해서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반환·원상복구·위약금·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등 5가지의 책임방식을 인정하는 점,

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앞의 책<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71면).

55) 북한 민법은 특수불법행위로서 행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제243조), 부분적 행위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제2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제245조), 비법점유재산의 반환의무(제246조), 재산비법점해의 책임(제247조), 인신침해의 손해보상(제248조), 동물관리자의 책임(제249조), 국토환경보호법규위반에 의한 손해의 보상(제250조), 공동침해행위의 연대적 책임(제251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긴급피난의 판단기준으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여 민사관계규정은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 침해 여부를 같이 고려하는 점,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형사책임의 병립을 같이 다루는 점<sup>56)</sup> 등을 들 수 있다.

#### 나. 채권의 이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 채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북한 민법(제77조)은 ‘채권채무의 양도’라는 제목 아래 채권채무의 양도성을 인정하면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는 유효성·양도성을 갖추고 채무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며, 채무인수는 유효성·이전가능성을 갖추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채권양도에 대해서 북한 민법이론은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인인 제3자에게 넘여가게 하는 처분행위로 이해하고 있으며,<sup>57)</sup> 법이나 계약에서 양도를 금지한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양도 등 채권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sup>58)</sup> 여기서 북한 민법이론은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사회주의조직인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적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계약과 채권관계의 설정목적이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국가계획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 근거를 찾고 있다.<sup>59)</sup>

56) 민사책임의 형사책임과의 병립을 다루는 태도와 관련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이 불법행위와 범죄를 구분하는 자본주의법제의 모습에 대해서 자본가들의 착취를 보호하는 반동적인 법으로 비판하고 있다(리현숙,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채권채무법의 존재형식과 그 변천에서의 특징,” 『력사법학』, 제51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85면).

57) 리학철, “채권양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력사 법학』, 제56권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120면.

5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앞의 책<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39면.

59) 북한의 민법이론은 일찍이 “계획은 엄격한 법적 성격을 띠며 국가계획에 규정된 항목들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규율의 위반으로 됩니다.”는 김일성의 언급(김일성선집 4권, 1960, 127면)에 근거하여 하며, 사회주의적 조직인 기관, 기업소, 단체 등 법인이 계약과 채권 채무관계를 설정하는 목적이 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 보장에 있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국가계획과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국가의 계획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 사이에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를 금하는 것으로 설명

또한 채무인수에 관하여 북한의 민법이론은 계획화원칙의 달성을 위해서 사회주의 조직인 법인 사이의 인수를 금지하고 있고, 채무자·인수인 사이를 물론이고 채권자·채무자·인수인 3자의 합의에 의한 인수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60)</sup>

다만 북한 민법(제77조)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같이 하나의 규정에 의해 다루면서 제3자에 대항요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 단순성을 보이고 있다.<sup>61)</sup> 또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모두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로 이해하고 있다.<sup>62)</sup>

## 다. 채권의 소멸

### (1) 채권소멸의 원인과 변제

채권의 소멸원인에 대해서 북한 민법(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은 가장 주된 소멸원인인 변제와 관련해서 변제자, 변제의 일괄이행원칙, 목적물의 품질, 목적물 멸실 훼손시의 효과, 변제의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제의 특징적인 점은, 변제자와 관련해서 채무자는 채무를 원칙적으로 직접 이행하되 채무자가 직접 이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변제케 할 수 있으나(제79조) 계획적 계약의 채무는 예외 없이 사회주의적 법인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점,<sup>63)</sup> 변제의 시기와 관련해서 정해진 변제의 기간<sup>64)</sup>을 준수하되 변제를 지연시키거나 그 수령을 지연시킨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제80조), 변제의 방법과 관련해서 법(계

하고 있다(서창섭, “공화국 민법은 기업소들에서의 계획과제수행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 「법학론 문집」, 제9호,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1961, 99-100면).

60) 리학철, “채무인수에 대한 일반적 리해”, 「력사 법학」, 제56권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112-114면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앞의 책, 346면.

61) 이 밖에 북한의 민법이론은 공민 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민사거래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폭리나 불로소득 등 개인의 이기주의가 배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최광철,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할 데 대한 원칙”, 「정치법률연구」, 제2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32면).

62) 리학철. 앞의 글(채무이전에 대한 일반적 리해), 114-115면.

63) 여기서 계획적 계약의 채무에 대해 제3자의 이행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은 계획적 채권관계의 본질과 당사자의 독립채산제의 원칙, 재정규율 강화의 요구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앞의 책<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87면).

64) 북한의 민법이론은 변제기간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간적 간격으로서 법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게 됨이 원칙이나, 위 기준에 의해서도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수령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에 최소한의 준비여유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앞의 책<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91면).

획과제,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한 번에 다 변제하여야 하는 ‘일괄이행의 원칙’을 채택하는 점(제81조), 변제의 목적물 품질과 관련해서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상등품을,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중등품을 기준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점(제82조), 변제의 장소와 관련해서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변제하되 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가지 기준(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 그 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 따른 장소에서 변제하도록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65)</sup>

또 북한 민법(제78조)은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 변제자는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제3자에게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상권(求償權)을 전제로 한 대위변제(代位辨濟)를 인정하고 있다.<sup>66)</sup>

## (2) 계획과제의 변경, 폐기

북한의 민법이론은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에 따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다루고 있다.<sup>67)</sup> 이는 1964년 러시아 민법(제159조)의 태도<sup>68)</sup>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채

65) 여기서 북한 민법(제86조)이 변제의 장소를 3원화하는 태도는 1964년 러시아 민법(제174조)를 계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위 러시아 민법은 러시아 민법 제174조는 “이행의 장소가 계약 또는 계획문건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채권채무의 본질로부터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건축물 인도채무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2) 금전채무(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공공단체의 금전채무는 제외된다)의 경우에는 채무 발생시의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채무이행기에 앞서 채권자가 주소를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이행장소의 변경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채무자의 부담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새로운 주소에서 이루어진다. 3) 모든 그 밖의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에서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무위반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은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책임’의 예로 기본건설시 공계약을 맺은 시공주가 공사 일부를 맡긴 제3자의 공사 계약이행을 지연시킨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에 제3자를 끌어들인 경우에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앞의 책, 609면).

67) 김일성종합대학 민법강좌, “채무에 관한 일반리론(2),” 「민주사법」, 제2호, 1959. 4. 25, 39-40면.

68) 1964년 러시아 민법(제159조)은 ‘계획문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인민경제계획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내용은 그 계획에 따라 정하여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반드시 계획문건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계획과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 등에 따른 부가적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Комментарии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 159, par. 5).

권채무의 내용이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정하여지고 그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에 따라 채권도 소멸하게 된다.<sup>69)</sup>

### (3) 면제, 상계

북한 민법(76조)은 채권소멸의 원인으로 면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당사자의 채무인인 연대채무의 면제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면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북한 민법(제76조)은 채권자가 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은 그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몫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70)</sup>

또한 북한 민사소송법(제69조)은 ‘맞소송의 제기’에서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맞소송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동시에 심리 해결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법상 채권의 대등액에서 소멸을 가져오는 상계(일명 ‘맞비기기’)<sup>71)</sup>를 반영한 절차법의 소송 관련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계와 관련해서 북한 민법이론은 계획적 계약의 채권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사이에는 상계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주의로서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sup>72)</sup>

### (4) 그 밖의 채권의 소멸원인

북한 공증법(제11조)은 “국가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 없는 물건을 공탁 받는다.”고 규정하여 ‘빚을

69) 김영규, 앞의 글(채권의 발생과 소멸), 43면.

70) 북한의 민법이론도 면제를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행위이나, 이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리광천, 앞의 글, 35면).

71) 상계에 대하여 북한 민법이론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에서 대등액만을 없애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이해하면서 그 명칭을 상쇄(相殺 또는 ‘맞비기기’라고 칭하고 있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위의 책, 356면).

72) 북한의 민법이론은, 자본주의 민법의 상계는 독점 자본가들이 채권의 신속한 이해를 보장하고 재산을 빨리 순환시켜 더 많은 독자적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민과 달리 사회주의적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상계는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만 허용되며, 특히 인민경제계획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적 계약의 채권채무는 당사자 사이에 스스로 상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리광천, “민사계약의 소멸사유와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 『정치법률연구』, 제1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35면).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에 대하여 공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채권소멸원인으로서 변제 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법이론도 종래의 비판적 태도<sup>73)</sup>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sup>74)</sup> 공증법(제14조)에 따라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공증을 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국가공증기관)에 채무를 대신 이행하여 채권소멸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의 민법이론은 별도의 명문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나 경계, 혼동을 소멸원인으로 인정하면서 상계와 더불어 공민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75)</sup> 따라서 북한 민법상 상계, 경계, 혼동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사회주의적 법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 IV.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비교와 통합방안

### 1.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비교

#### 가. 유사점

##### (1)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북한의 민법이론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사실과 그 사실의 총체인 법적 조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사실 및 법률요건으로 체계화하는 것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 민법이론은 사람의 정신작용인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법률사실로서 시간

73)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공탁은 자본주의나라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강요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를 합법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앞의 책, 58면).

74)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권자의 소재불명, 채무이행의 접수를 피하거나 채무자의 잘못 없이 채무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보통의 채무이행인 변제에 갈음하여 공탁을 강행적·간접적인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원인으로 다루고 있다(리광천, 앞의 글, 35면).

75) 북한의 민법이론은 새 채무를 발생시키는 대신에 낡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합의인 경계(일명, '채무개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합일되는 혼동(일명, '점합')을 공민 사이의 채권관계에 적용되는 소멸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 민법강좌, 앞의 글, 40면; 이종복, "북한 채권법의 개관 -1973년 심의용 민법(1)을 중심으로-", 「사법관계와 자율」, 이종복교수 논문집 간행위원회, 1993, 79면).

의 경과 등과 같은 ‘사건’의 개념을 다루고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적법행위를 ‘민사법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로 이해하여 우리 민법상 준법률행위에 상응하는 행위개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 (2) 권리변동의 원인과 법률행위

북한 민법(제24조)이 법률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민사법률관계의 설정·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은 외형상 우리 민법이론과 유사하다.

또한 법률행위의 종류를 나눔에 있어서 북한의 민법(제24조)은 방식 여부를 기준으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누고 있고, 또 북한의 민법이론은 의사표시의 수(數)와 모습을 기준으로 일방적 법률행위, 쌍방적 법률행위, 다방적 법률행위로 나누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 민법이론은 법률행위의 종류를 우리 민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유상적 법률행위와 무상적 법률행위, 합의적 법률행위와 이행적 법률행위, 주되는 법률행위와 종속되는 법률행위, 원인과 떼어 수 없는 법률행위와 원인과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법률행위, 독자적인 법률행위와 보조적인 법률행위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각각 우리 민법상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무인행위와 유인행위와, 독립행위와 보조행위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민법상 서로 유사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 (3) 물건변동의 원인

북한 민법(제38조)은 소유권취득원인 중 ‘계약’과 ‘행위’는 물건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 해석되고, ‘법’과 ‘사건’은 물건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의 규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는 우리 민법(제186조, 제187조)이 가장 주된 물건변동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과 유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북한 민법(제62조)은 간접적으로 개인소유권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민법이론은 물수를 물권의 소멸원인으로 다루고 있으며, 북한의 행정처벌법(제22조)과 형법(제23조 제7호, 제32조)은 물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목적



물의 멸실과 물권의 포기는 조리상 북한 민법상으로도 물권의 소멸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민법상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4) 채권변동의 원인

##### (가) 채권발생의 원인

북한 민법은 일반계약으로서 우리 민법의 전형계약의 모습인 매매, 도급, 임치, 사용대차와 임대차, 위임, 소비대차 등에 각각 대응하는 팔고사기 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 계약, 위임계약, 꾸기 계약 등의 유사한 계약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채권 발생원인인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북한 민법(제237조)은 우리 민법(제747조 제1항)과 같이 원물반환의 원칙과 예외적인 가액반환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sup>76)</sup>

또 북한 민법(제240조, 제256조, 제257조)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우리 민법(제750조)와 같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위법성·인과관계·손해의 발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방위·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다루는 점에서 외견상 우리 민법(제750조, 제761조)과 유사하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은 특수불법행위의 모습으로 행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제243조) 및 부분적 행위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제244조), 기관·기업소·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제245조), 동물관리자의 책임(제249조), 공동침해행위의 연대적 책임(제251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감독자의 책임(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760조) 등과 서로 유사하다.

##### (나) 채권이전의 원인

북한 민법(제77조)은 채권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지위를 이전시키는 채권양도·

76) 또한 북한 민법(제238조)은 부당이득 목적물의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 자는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법(제203조)이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법무부 통일법무과, 앞의 책<북한 민법주석>, 1002-1003면<문헌안 집필 부분>).

채무인수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채무인수의 요건으로서 채무의 유효성·이전성을 요하는 것과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이외에 채권자·채무자·인수인 3자의 합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인다.<sup>77)</sup>

#### (다) 채권소멸의 원인

북한 민법(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과 민사소송법(제69조), 공증법(제11조)과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변제를 가장 주된 원인으로 하고, 이 밖에 공탁, 상계(상채, 맞비기기), 면제, 혼동(결합) 등을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인정하는 점에서 우리 민법(제460조, 제487조, 제492조, 제500조, 제506조, 제507조)과 외견상 비슷하다.

또한 북한 민법(제78조)은 채무자 아닌 변제자가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법(제482조)의 대위변제(代位辦濟)와 유사점을 보인다.

### 나. 차이점

#### (1)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북한의 민법이론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법률사실을 분류함에 있어서 사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위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상 사건에 대응하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법률사실로서의 ‘용태’와 이에 따른 ‘내부적 용태’를 다루지 않고 바로 외부적 용태로서의 행위로서 다루는 단순성을 보인다.<sup>78)</sup>

또 북한의 민법이론은 행위 중 적법행위를 나눔에 있어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민사법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 이외에 ‘행정적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 민법의 공법적 요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7) 김영규, “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2-123면.

78) 내부적 용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민법이론에 대해서 북한 민법(제62조)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 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 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자”에 대해서 내부적 용태인 관념적 용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이론은 사건에 대응하는 개념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백영훈, 앞의 글, 65-66면), 우리 민법이론의 내부적 용태인 심리상태와 외부적 용태인 행위를 모두 묶어서 ‘행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법률사실의 총체로서 법적 조건(법률사건)을 법률행위와 그 밖의 법률사건으로 다루면서 여기에 행정작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 법제상 행정법에서 다루어지는 행정작용을 민법의 법률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북한 민법의 공법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 (2) 권리변동의 원인과 법률행위

북한 민법은 가장 주된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개념과 종류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법률행위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노동당의 정책의 관철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성을 가미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행위의 핵심요소인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법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sup>79)</sup>

다음으로 북한 민법은 법률행위의 종류를 다룸에 있어서 재산행위로서 물권적 법률행위와 채권적 법률행위만을 다룰 뿐 채권양도 등을 다룸에 있어서 준물권행위를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보인다. 또 북한 민법(제24조)은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로 다루는 것과는 달리 일률적으로 무효원인으로 다루는 단순함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 민법(제82조)은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구별함에 있어서 유상행위가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만을 다룰 뿐이고 우리 민법(제56조)의 담보책임과 같은 체계적인 민사책임을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단순하다. 또한 북한 민법(제93조)은 법인이 체결하는 계약을 모두 요식행위로 다루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물권변동의 원인

북한 민법(제39조)은 점유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다루지 않고 소유권 등의 본권의 권능으로만 다루고 있어서, 이를 독립한 물권으로 다루는 우리 민법(제192조-제210조)과

79) 법률행위의 개념에 정치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에 반영되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회주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앞의 책<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56-57면).

차이를 보인다.

소유권 등의 본권취득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245조-제248조)과 달리 북한 민법은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타인 재산을 장기점유한 자에게 불로소득의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취득시효를 부정한다.

또한 북한 민법(제51조)은 우리 민법(제249조)과 달리 개인이 아닌 사회협동단체와 같은 법인의 소유(제952조)는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모든 무주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 개인에 대한 무주물선점을 부정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해서만 국유로 하고 사인의 무주물선점을 인정하는 우리 민법(제252조)과는 다르다.

한편 물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북한 민법(제27조 단서)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진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반사적 효과로 종래 불법원인급여자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원인이 되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국가귀속을 다루지 않는 우리 민법(제746조)과의 차이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59조 제2항)은 국가소유권과 달리 개인소유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sup>80)</sup> 이에 따라 소유권의 항구성을 근거로 소유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우리 민법(제162조 제2항)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4) 채권변동의 원인

##### (가) 채권발생의 원인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으로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계획적 계약을 일반계약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우리 민법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서면에 의한 요식계약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 우리 민법에서 인정될 여지가 없는 행정문건(인민경제계획문건)을 채권발생원인으로 다룸으로써, 북한 민법이 인민경제계획실현의 도구로되는 정치성을 보

80) 이러한 북한 민법(제259조)의 태도는 국가소유권 및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이 개인소유권보다 더욱 보호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한 보호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점도 우리 민법과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고 있다.

또한 북한 민법(제194조-제199조, 제200조-제204조, 제225조-제229조)은 일반계약에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여객수송계약, 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등을 전형계약으로 다루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 민법(제175조-제176조)은 사무관리를 무임관리로 칭하면서 우리 민법(제734조-제740조)이 법정채권발생원인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법적 의무 없이 하는 ‘재산의 보관관리’ 및 ‘재산의 처리’와 관련해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법의 보관계약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민법은 사무관리에 대해서 우리 민법과 체계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사회적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 민법과 달리 상호부조보다 근로자들 속에서 국가사회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배양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색을 띠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민법(제27조, 제29조)은 법정채권발생원인으로서 특수한 부당이득인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해서, 이를 수익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여 수익자에게 이를 귀속시키는 우리 민법(제746조)의 그것과 달리 정치색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40조)은 우리 민법(제390조, 제750조)이 민사책임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이원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 책임을 한 규정(제240조)에 의하여 다룸으로써 민사책임을 일원화(一元化)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북한 민법(제256조, 제257조, 제258조)은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제761조)과 달리 ‘국가 및 사회의 이익’을 위한 정당방위·긴급피난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책임과 다른 책임의 병립을 인정하는 등 불법행위의 책임인정에 있어서 정치색을 띠므로써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나) 채권이전의 원인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적 조직인 법인들 사이에 계획적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는 그 양도와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서 당사자인 법인과 자연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이전에 대해서 별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북한 민법의 태도는 계획적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서 계획과제의 정확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 민법의 공법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이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를 불요식행위로 다루는 것과 달리 북한

민법은 이를 요식행위로 다루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은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를 단 1개의 조문에 의하여 규율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제450조 제2항-제452조, 제455조-제459조)이 규정하는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항요건·승낙 및 통지의 효과·양도통지와 금반언 및 채무인수와 승낙 여부의·소급효·보증 및 담보의 소멸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들이 없다. 이는 북한 민법상 채권채무의 이전거래에 대한 입법적 단순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민법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sup>81)</sup>

#### (다) 채권소멸의 원인

채권의 가장 주된 소멸원인인 변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이론이 변제의 방법으로 일괄이행과 분할이행을 모두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 민법(제81조, 제82조)은 ‘일괄이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변제의 목적물의 품질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이 종류물의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중등품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상등품(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중등품)을 기준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북한 민법이론은 우리와 달리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다루는 차이를 보인다.

계획적 계약의 채무는 법인 아닌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함은 물론, 법인 사이의 상계·경계·혼동을 금지하는 등 공민 개인과 법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채권의 소멸원인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과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권리변동의 원인의 통합방안

### 가. 통합방향의 논의를 위한 전제

권리변동의 원인을 비롯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따른 민사관계의 실체적 규정은 통일방식에 관한 남북한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자유민

81) 김영규, 앞의 글<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20면.

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와 이의 법적 표현인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및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비롯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 합의서의 체결을 염두에 두고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sup>82)</sup> 권리변동의 원인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조문을 기본 토대로 해서 남북한 민법의 각 조문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른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통합에 있어서 먼저 선결되어야 할 기본과제라 하겠다.

#### 나. 차이점과 통합방안

위에서 살펴본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북한 민법(제1조)이 1964년 러시아 민법의 영향을 받아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과 국가경제계획실현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사적 자치가 그 기본을 이루어야 할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행위·물권변동의 원인·채권변동의 원인 등의 각 영역에서 통치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해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법률행위 등 권리변동의 원인 등의 민법의 규정을 공법적 성질을 띠게 하는 본질적 차이점을 보이는 동시에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위와 같이 권리변동의 원인을 규율하는 북한 민법의 공법적 성격을 띠는 규정들은 향후 통합을 위한 입법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과규정이나 기득권존중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선해서 그 적용을 제한 내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위에서 살펴본 내용 중 법률행위, 물권 및 채권의 변동원인에 걸쳐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것 중 북한 민법에 없는 규정들은 북한 민법의 단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재산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규정이 북한 주민과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82) 신영호, “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제8호, 2011, 58면.

또한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차이점 중 우리 민법의 사무관리를 보 관계약과 관련해서 규율하는 것과 같이 공법적 특성을 띠지 않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남북한 민법통합에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어 해결하면 될 것이다.

다만 남북한 민법이 차이점 중 북한 민법이 ‘법률행위의 모두(冒頭)에 ‘민사’라고 언급하는 것은 민사상의 법률행위와 행정행위 등 다른 법률상의 법률행위와의 구별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점에서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sup>83)</sup> 또한 북한 민법이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을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요식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민법통합에 있어서 그 수용여부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sup>84)</sup>

#### 다. 유사점과 통합방안

위에서 살펴본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은 법률행위, 물건 및 채권변동의 원인 등의 각 영역에서 주로 사회주의로서의 통치관계가 이념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없거나 아주 미약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그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을 통일 민법의 대본으로 다룰 때 입법의 충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나, 외형상의 유사점 이외에 그 법기술적 측면과 달리 법이념적 측면에서 실제적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sup>85)</sup>

이 밖에 우리 민법의 매매, 도급, 임치, 사용대차와 임대차, 위임, 소비대차 등에 대응하여 북한 민법이 팔고사기 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 계약, 위임계약, 꾸기 계약 등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점은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그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sup>86)</sup>

83) 김영규,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67면.

84) 김영규, 앞의 글<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121면.

85) 즉 외형상의 유사점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북한 민법이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이념적으로 통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들은, 법기술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되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혀서 다루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영규, 앞의 글<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127면).

86) 김영규, “남북한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의 유사점,” 「통일과 법률」, 제20호, 법무부, 2014, 60면.



## 라. 권리변동의 원인과 경과규정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사회주의체제유지를 위한 통치관계를 반영하는 북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은 통일 이후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들 중 남북한 민법 사이에 서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 민법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과 경과규정으로 대표적인 것<sup>87)</sup>들로서 먼저 법률행위 및 소멸시효와 관련한 것으로 소유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우리 민법(제162조 제2항)과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북한 민법(제259조 제2항)과의 충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원칙을 단기간(1년)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제260조)과 장기간(10년)으로 다루는 우리 민법(제162조 1항)과의 충돌, 특수한 부당이득인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북한 민법(제27조, 제29조)의 태도와 국가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제748조)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한 물건변동의 원인과 경과규정으로 대표적인 것들로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민법과 이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제192조-제211조)과의 충돌, 선의취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북한 민법(제62조)과 우리 민법(제249조-제251조)과의 충돌, 무주물의 귀속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는 북한 민법(제52조)과 위 제한이 없는 우리 민법(제252조)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채권변동의 원인과 경과규정으로 대표적인 것들로는 계획적 계약을 인정하는 북한 민법(제101조-제145조)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의 충돌, 일반계약(전형계약)으로 여객운송계약, 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등을 다루고 있는 북한 민법(제193조-제199조, 제200조-제204조, 제225조-제229조)과 이를 전형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의 충돌,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모두 서면에 의한 요식계약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제101조-제145조)과 요식계약을 강제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의 충돌, 계획과제의 변경 또는 폐기를 채권발생(소멸)원인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제4조, 제104조)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의 충돌, 사무관리를 보관계약으로 다

87) 김영규, “북한 민법의 변천과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분단 70년: 분단과 이산에 따른 민사법적 쟁점과대응」(금산 최달곤 교수 5주기 추모학술세미나), 북한법연구회, 2015. 12. 28, 50-51면.

루는 북한 민법(제175조-제176조)과 이를 계약이 아닌 법정채권발생원인으로 다루는 우리 민법(제734조-제740조)과의 충돌,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민사책임으로 일원화(一元化)하는 북한 민법(제240조)과 이를 각각 이원화(二元化)하여 다루는 우리 민법(제390조, 제750조)과의 충돌,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국가 및 사회의 이익’을 위한 정당방위·긴급피난을 인정하는 북한 민법(제256조, 제257조)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제761조)과의 충돌, 민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같이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병립을 인정하는 북한 민법(제258조)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 V. 결 론

이상에서 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및 북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률행위·물권변동과 채권변동의 원인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을 비교·검토한 후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한 민법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을 인정하는 점, 가장 주된 원인으로 법률행위를 다루는 점, 물권변동의 원인으로 법률행위와 그 밖의 것으로 나누어 규율할 수 있는 점, 개인소유권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점, 채권발생원인으로서 계약과 부당이득·불법행위를 다루는 점, 채권소멸원인으로서 변제와 상계·공탁·경계·면제·혼동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법률행위를 비롯한 모든 권리변동의 원인에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개인소유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점, 모든 무주물에 대해 국가귀속을 다루는 점,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다루는 점, 계획적 계약을 중시하면서 계획의 변경·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다루고 우리 민법과 다른 여객운송계약·저금계약·은행대부계약 등의 일반계약을 두고 있는 점, 불법원인급여의 국가귀속을 다루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리변동의 원인에 대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해야 하며, 그에 위배되며 정치색을 띠는 북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은 적용

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유사점을 띠는 요소들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되, 서로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과 관련해서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들로써 소멸시효, 점유권,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사무관리,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논문접수 : 2018. 4. 21. 심사개시 : 2018. 4. 23. 게재확정 : 2018. 5. 2.)

## 참 고 문 헌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8판)」, 박영사, 2018.
- 김영규, 「민법총칙(제2판)」, 진원사, 2015.
- \_\_\_\_\_,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_\_\_\_\_, “남북한 채권법의 차이점,” 「통일과 법률」, 제6호, 법무부, 2011.
- \_\_\_\_\_, “채권의 발생과 소멸”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_\_\_\_\_, “남북한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의 유사점,” 「통일과 법률」, 제20호, 법무부, 2014.
- \_\_\_\_\_, “사회주의 민법의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_\_\_\_\_, “북한 민법의 변천과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분담 70년: 분단과 이산에 따른 민사법적 쟁점과 대응」 (금산 최달곤 교수 5주기 추모학술세미나), 북한법연구회, 2015. 12. 28.
- 김일성종합대학 민법강좌, “채무에 관한 일반리론(2),” 「민주사법」, 제2호, 1959.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편,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 \_\_\_\_\_, 「민법학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 \_\_\_\_\_, 「공화국채권채무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 김재교, “공화국 민법전 초안(총칙편) 작성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국가 관리에서 우리당 군중 로선의 관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과학원출판사, 1963.
- 김천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사회교육권학보」, 제36호, 사회과학출판사, 2002.

- 리광천, “동의의 법적 효력과 특징,” 「정치법률연구」, 제7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_\_\_\_\_, “민사계약의 소멸사유와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 「정치법률연구」, 제15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 리학철, “채권양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력사 법학」, 제56권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_\_\_\_\_, “채무인수에 대한 일반적 이해”, 「력사 법학」, 제56권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리현숙, “외국 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권의 대상에 대한 비교고찰,” 「력사법학」, 제50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 \_\_\_\_\_,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채권채무법의 존재형식과 그 변천에서의 특징,” 「력사법학」, 제51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북한 가족법 주석」, 법무부, 2015.
- \_\_\_\_\_, 「북한 민법 주석」, 법무부, 2015.
- 백영훈, “법률사실의 분류”, 「력사법학」, 제51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 사법성 편, “공화국 민법전(초안) 중 총칙과 소유권법편의 몇 가지 문제”, 「민주사법」, 제6호, 사법성, 1959.
- \_\_\_\_\_, “공화국 민법전 초안(총칙편) 작성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민주사법」, 제6호, 사법성, 1959.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서창섭, “공화국 민법은 기업소들에서의 계획과제수행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 「법학논문집」, 제9호,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1961.
- 신영호, “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제8호, 2011.

- 윤종철,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의 대등한 지위와 독자성에 대한 리해”, 「력사법학」, 제58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2.
- 이은정,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 「통일과 법률」, 제20호, 법무부, 2014.
- 이종복, “북한채권법의 개관 -1973년 심의용 민법(1)을 중심으로-”, 「사법관계와 자율」, 이종복교수 논문집 간행위원회, 1993.
- 최광철, “ 계약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할 데 대한 원칙”, 「정치법률연구」, 제2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한명섭, “북한에 의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자산 몰수·동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통일과 법률」, 제3호, 법무부, 2010.
- 西北政法學院科研處, 「民法原理」, 1983.
- 田中英夫・竹内昭夫, 「法の實現における私人の役割」, 東京大學出版會.
- Братусь С.Н., Садиков О.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82.

## 〈Abstract〉

**The Causes of Rights Change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Kim, Young-Kyu

This paper, as causes of rights changes in North Korean Civil Law, examines the causes of the changes of the Juristic Acts, a Real Right, and a Claim, which are stated as express term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as well as legal requirements, legal facts and the North Korean Civil Law.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study ultimately suggests 'The Unification Plan on the Civil Law in South and North Korea', by comparing and examining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 regard to the causes of changes in rights.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below. Both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accept the legal facts and legal requirements as cause of the changes in rights. The point that both consider the Juristic Acts as main cause. The point that the reasons for the change of rights in the real estate can be sorted into Juristic Acts and others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point that both acknowledge Bona Fide Acquisition in private ownership. The point that both deals with the contract, the unjust gain, the illegal activity(TORTS), as cause for occurrence of a claim. The point that both acknowledge Performance and Deposit, Set-off, Novation, Release, Merger as cause for lapse of a claim.

However, the North Korean Civil Law is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as below. The Civil Law in North Korea emphasizes the political nature in the cause of all the rights, including Juristic Acts.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applies Extinctive Prescription to private ownership. The point that all Articles without Owners are dealt with the National Treasury, the point that administrative document is treated as the cause of a Claim, the point that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acknowledge the planned contract, and has general contracts such as savings contrac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the point tha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s dealt as the National Treasury

and et cetera are showing differences from our Civil Law of South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ause of changes in rights for The Unification Plan on the Civil Law i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basic orders of liberal democracy. Those regulation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at are considered to be violated upon the above and which are politically motivated, should be excluded from being applied. In addition,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each other should be extensively applied to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but transitional provisions should be made for elements that differ from each other.

The transitional provisions are needed in regard to changes of Rights in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Extinct Prescription, Possessory Right, Bona Fide Acquisition, and Vesting of Articles without Owners, Management of Affairs, Illegal Activity(TORTS), Self-Defense, Act of Necessity and et cetera.

### **Key Words**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e Causes of Rights, Juristic Acts, a Real Right, a Claim, The Unification Plan on the Civil Law in South and North Korea, transitional provisions